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올 한해 성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 도약기반 마련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은 올 한해 새만금·해양수산분야에 있어 빛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군산항 제2준설도 투기장 건설사업 확정 등으로 향후 새만금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개발 -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및 도약기반 마련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지난 2020년 발의된 이 법안은 2년 이상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었으나, 도·새만금청·도의회·지역 국회의원 등 여야를 넘나드는 협치로 법안 통과와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의 핵심요건으로 국정과제 첫 실현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내년 4월 군산 산업위지지역 종료를 앞두고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부유지 개발과 관련, 고부가 첨단농업을 위한 농생명용지는 면적 94.3㎢를 총 7개 공구로 나누어 2025년 완료 목표로 조성중으로 77%의 공정률로 올해 목표 대비 초과 달성했다.(올해 목표공정률 71%)

또한, 새만금산업단지에는 면적 18.5㎢, 총 9개 공구 중 2개 준공, 2개 조성 중으로 현재 33%의 공정률(올해 목표공정률 33%)을 보이고 있고, 수변도시도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호안·매립공사 추진중이며 12월현재 79% 공정률로, 올해 목표 공정률

79%를 달성하는 등 새만금 유지조성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과 관련, 지난 6월 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개최, 8월 새만금케이팝페스티벌 온라인 개최, 이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준공(내년 7월 개관) 등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고, 지난 6월 신시도호텔 착공 같은 달 해양테마관광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민간주도 관광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새만금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수산 - 어촌 생활공간 혁신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스마트 수산기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새만금 산업단

지에 스마트 기술을 수산식품 산업과 접목시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김 등 수산식품 산업의 스마트화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부안 격포항이 클린(CLEAN) 국가 어항 시범사업에 선정돼 무질서하게 난립된 시설을 개선하고, 조망공간인 격포루 및 친수공간·육상정원 등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경관이 살아있는 쾌적한 어항으로 조성돼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해 머물고 싶은 어항으로 탈바꿈한다.

▲해양항만 - 군산항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개발기반 기반 조성

군산항의 오랜 숙원이자 최대 현안인 항로준설을 위한 제2준설도 투기장 건설사업이 지난 8월 24일 예비타당성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항로준설에 승용트럭 여 운항을 운영사와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비 4915억원이 투입돼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군산항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항만 - 군산항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개발기반 기반 조성

국정청만 항로유지를 위해 내년도 기초조사 용역 후 2024년부터 4년간 투기장 건설사업이 추진돼 향후 30년간 군산항의 준설도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 1일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섬을 이용하는 '누구나' 여객선 반값인제도를 도입해 육상교통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해상교통의 편익증진과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기존 섬 주민에게만 한정하던 지원 대상을 도내 12개 전 도서를 방문하는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도서지역을 찾는 이용객의 접근

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

6월 29일 무분별한 선적식 이용에서 해양공간의 특성·이용과 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전북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고시로 개발과 보전이 함께 하는 합리적인 해양공간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항만 - 군산항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개발기반 기반 조성

이밖에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행사인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어 전북도지배 수상스키·웨이크 보드대회, 새만금국제요트대회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 대회를 안전하고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및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양수생 도 새만금개발과장은 "2022년은 새만금 및 해양수산분야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사업법 통과, 새만금유역 3단계수질개선대책 추진, 스마트 수산기공 종합단지 등 각종 공모 선정, 제2준설도 투기장 건설사업 확정, 전국최초 도서지역 반값 여객선 운임지원, 토하양식기술 특허 등록 등 일일이 말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 및 조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

6월 29일 무분별한 선적식 이용에서 해양공간의 특성·이용과 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전북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고시로 개발과 보전이 함께 하는 합리적인 해양공간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전라북도 해양공간의 활용 실태와 미래 수요 파악 등 합리적 공간관리 및 바다가 제공하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해양자원의 지속이용 관리를 위한 9개 용도구역을 지정해 체계적 개발 관리를 추진한다.

이밖에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행사인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어 전북도지배 수상스키·웨이크 보드대회, 새만금국제요트대회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 대회를 안전하고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및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양수생 도 새만금개발과장은 "2022년은 새만금 및 해양수산분야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사업법 통과, 새만금유역 3단계수질개선대책 추진, 스마트 수산기공 종합단지 등 각종 공모 선정, 제2준설도 투기장 건설사업 확정, 전국최초 도서지역 반값 여객선 운임지원, 토하양식기술 특허 등록 등 일일이 말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 및 조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민주 신영대 의원,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이행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산)이 22일 국가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로 명시되어있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에너지 효율화 조치 대상은 국회와 법원을 포함한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 구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효율화 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법 국가적 과제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해야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올해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여성소비자신문과 더 나은세상을 정책연구와 입법활동,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묵묵히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을 선정·발표했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중 1인으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36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생법안 전문가는 평가와 함께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의회, 종교유산 활용 방안 연구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관광산업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연)은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회에서 정책개발 목적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을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변 자원과의 연계 등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주식회사 놀지 연구진, 문화유산과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인 진명숙 전북대학교 교수(고고문화인류학과)의 연구 결과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 활용 현황, 종교문화유산 국내의 사례, △종교문화유산 활용 관광활성화 방안 등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의 비전을 '대한민국 종교여행의 중심 전라북도'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종교 성지화 및 체험기반 조성, 종교 유산 간 연계 관광 진흥이라는 2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김재훈 기자

여야, 예산안 · 세법 일괄 합의

오늘 본회의 열고 의결 정부안 대비 4.6조원 감액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6조원 감액됐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주요영 국민의회·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계부처를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2023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제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야주책용 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인재주책 관련 전세임대용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8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기초연금 부부간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을 합의하지 못 한 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병·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957억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전라북도물자물자사업 예산은 4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자주 한시 특별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비용 인상 △발달장애아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채용촉진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생성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며 시행까지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기로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정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했다.

기업신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합의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만원, 20~30년 400만원, 30년 이상 600만원으로 구분해 봤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조5000억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00억원으로 정했다. /뉴스1



부안군에 위치한 소노벨 변산에서 22일 제27차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한 시·군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농태양광, 국내 실증시범 60곳서 성과 나타나”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열고 안전 2건 의결 영농태양광 발전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는 부안군에 위치한 소노벨 변산에서 22일 제27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안정적 수입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총 2건의 안건을 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의장협의회는 “쌀 소비량 위축과 생산량 증가 등으로 쌀값은 떨어졌지만 생산원가는 증가해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농태양광 시설이 농업과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지만 농지법 등의 규제로 최대 8년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농태양광은 독일에서 1981년 처음 연구가 실시된 이래 현재는 현장에 도입된 상태고 우리나라도 실증사업 60여 개소에서 관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농지법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태양광 발전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태기자